

##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yojang@kiep.go.kr, Tel: 044-414-1221)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 차 례

1. 연구 배경
2. 트럼프 2기 이민 정책 추진 현황
3.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외국인력 유입 동향
4. 평가와 시사점

## 주요 내용

-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2025년 1월 20일)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조치는 총 16건으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
  - 트럼프 2기 출범 후 남부 국경 통과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의 이주민 구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단속·체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하였으며,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단속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 ▶ 본고의 분석 결과 미국 노동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통제가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을 시사함.
  - 2008~23년 기간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구인 비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농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등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이민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음.
  - 2008~23년 기간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주에서 신규 이민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1기 전의 구직-구인 배율이 표준편차 한 단위(1.57)만큼 낮아지면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 근로자가 약 0.3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을 신규 이민자 유입을 통해 완화해 왔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경제성장 동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 실제로 최근 미국의 농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한국 역시 일시적, 구조적 노동 공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민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미국과 같은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저출생, 고령화는 향후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은 이를 다소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단 이민자 유입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인원을 신중히 늘리면서 기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 연구 배경<sup>1)</sup>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4개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로 이민 통제 및 국경 보안 강화를 포함한 ‘안전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Safe Again)’을 제시함.<sup>2)</sup>
  - ‘안전한 미국 재건’ 과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면 철회,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국경 장벽 건설과 군대 배치, 미등록 이민자<sup>3)</sup> 대규모 추방, 마약 카르텔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중단 등을 통해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종합적인 국경 안보 정책임.
-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s) 중 이민 관련 조치는 16개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sup>4)</sup>
  -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밀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한 미국인 우선, 반이민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5)</sup>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1기 행정부 때보다 강경하고,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한다는 특징을 보임.

■ 트럼프 2기 출범 후 남서부 국경 지역 통과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이주민 구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그림 1, 2 참고).

- 바이든 행정부 임기에 월평균 18만 3,000건에 달하던 미국-멕시코 국경 통과 시도 건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 4달간 평균 1만 2,000여 건에 그침.
  - 트럼프 취임 이후 국경 통과 시도가 90%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1기 시절의 월평균 6만여 건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임.
-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주도하는 국경 통과 이주민 대상 단속이 주를 이루었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ICE의 단속과 구금이 활발해짐.
  - 단 바이든 행정부 시기 후반부터 이미 ICE의 이주민 구금이 증가하는 추세였음.

1) 본 보고서 집필에 세계지역연구센터 박지은 인턴이 참여하였으며, KIEP 기본연구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2025. 12. 발간 예정) 중 전북대학교 중남미 스페인어학과 이승호 교수가 작성한 원고 일부가 본고에 활용됨.

2) 강구상, 이천기, 김혁중(2025. 2. 13.),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 본고에서는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를 ‘미등록 이민자’로 통칭함.

4)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 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본고의 제2장에서 검토함.

5) “The rise of Stephen Miller, the architect of Trump’s hardline immigration policy”(2025. 6. 15.), *The Guardian*.

그림 1. 남서부 국경 통과 시도(2018. 10~2025. 5.)  
(단위: 천 건)



주: 미국과 멕시코 사이 남서부 국경은 전체 국경 통과 시도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지역임. 그래프의 국경 통과 시도 건수는 세관국경보호청의 국경순찰대, 현장운영국, 공중보건진급조치(Title 42)에서 집계한 통계의 누적 건수임.  
자료: 미 세관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www.cbp.gov/newsroom/stats/southwest-land-border-encounters>(검색일: 2025. 6. 28.).

그림 2. 이민자 구금(2018. 10~2025. 5.)  
(단위: 천 건)



주: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은 주로 미국 내 체류 미등록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세관국경보호청의 단속은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자료: TRAC Immigration, [https://tracreports.org/immigration/detentionstats/book\\_in\\_agenc\\_program\\_table.html](https://tracreports.org/immigration/detentionstats/book_in_agenc_program_table.html)(검색일: 2025. 6. 28.).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은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노동시장에 공급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2020~22년 팬데믹 기간 중 해고, 감염으로 인한 병가, 조기은퇴 등으로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공급이 더디게 이루어졌음.<sup>6)</sup>
- 미국에는 2023년 기준 약 3,068만 명의 이주민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17.7%를 차지함.<sup>7)</sup>
  -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업(26.1%), 건설(25.7%) 운송(22.4%) 등의 분야에서 이주민 의존도가 높음.
  - 이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민자는 1,181만 명이며, 이들은 주로 농업(15.1%), 건설(14.1%), 외식업(7.6%) 등에 종사하고 있음.
  - 내국인 근로 여건이 미비한 곳에 외국인력 공급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단속과 추방은 해당 분야에서 노동공급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sup>8)</sup>
- 본고에서는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본 후, 노동시장 공급 부족과 이민자 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민 통제 강화가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 관련 쟁점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6)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음. Statista(2023. 10. 13.), <https://www.statista.com/chart/27610/inflation-and-wage-growth-in-the-united-states/>(검색일: 2025. 6. 30.).

7) American Immigration Council(2024), "New Americans in the US."

8) "Donald Trump's immigration restrictions threaten restaurant labour shortage"(2025. 6. 8.), *Financial Times*: "We can't do without these people": Trump's migrant crackdown has businesses worried(2025. 6. 28.), *BBC*.

## 2. 트럼프 2기 이민 정책 추진 현황

### 가. 이민 정책 수립 현황<sup>9)</sup>

■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불법적인 남부 국경 통과를 미국 주권에 대한 ‘침략(invasion)’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경의 물리적 봉쇄와 감시를 강화함.<sup>10)</sup>

- 남북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sup>11)</sup>을 발동한 후 국토안보부 장관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군, 주방위군(National Guard), 예비군(Ready Reserve)을 동원하고, 국방부의 군사 건설 자금을 활용하여 국경 장벽 건설 및 감시체계 확충을 추진하고자 함.
  -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과 「미 이민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5(a)조 출입국 규제 권한을 근거로 ‘침략’이 중단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입국 제한을 지속하도록 함.
- 미군에 국경 방어 임무를 공식 부여하고, 미북부사령부(United States Northern Command)에 국경 보호와 함께 30일 내 대규모 불법 이주, 마약 밀매, 인신매매 및 밀입국 차단 등 작전계획 수립을 지시함.
- 국경에서 체포된 모든 미등록 이민자를 추방 전까지 구금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중단된 멕시코 대기 정책(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sup>12)</sup>을 부활시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기간 중 미국 대신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함.
- 연방, 주정부, 지역 경찰 간 합동 국토안보태스크포스(HSTFs: Homeland Security Task Forces)를 구성하고, ICE, 국경순찰대 인력 증원을 추진하여 밀입국 및 범죄 조직 단속을 시행하며, 이민법 집행력을 강화함.
-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 해군기지의 이민자 수용시설을 최대 규모로 확장하고, 중범죄 외국인 구금 공간을 확보함.
-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jurisdiction)’를 공식 지정하고, 연방자금 지원 중단과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강제 집행을 추진하도록 함.
  -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대하는 각종 주정부 정책(불법 체류자에 대한 주 내 학비 혜택, 형사처분 시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한 선처 등)이 연방법에 위배되거나 위헌일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집행 중단 지시
- 폭력적 시위로써 연방법 집행을 저지하는 경우 ‘반역(rebellion)’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무 집행 기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소 2,000명의 주방위군 소집을 가능하게 함.
  - 이 조치는 대통령이 반란, 폭력, 내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과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소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10 U.S.C. 12406)을 근거로 함.

9) 본 소절은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의 Presidential Actions에 공개된 이민 관련 행정조치를 참고하여 작성함.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검색일: 2025. 6. 25.).

10) 각 조치별 출처는 [표 1] 참고

11)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1976)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포 절차, 권한의 범위, 의회의 견제 및 종료 절차, 보고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연방법임.

12)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규정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임.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 행정조치(2025. 1. 20.-6. 7.)

주제별 분류	행정조치	유형	발표
남부 국경 통제 강화	<a href="#">주(州)에 대한 침략(invasion)으로부터 보호</a>	Proclamation	1.20
	<a href="#">미 남부 국경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a>	Declaration	1.20
	<a href="#">미군의 영토 보전 보호 임무 명확화</a>	Memorandum	1.20
	<a href="#">국경 보안 강화</a>	EO 14165	1.20
	<a href="#">미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 이민법 집행 강화</a>	EO 14159	1.20
	<a href="#">Guantanamo Bay 해군기지 내 이민자 수용시설 확장</a>	Memorandum	1.20
	<a href="#">외국인 범죄자로부터 미국 지역사회 보호</a>	EO 14287	4.28
	<a href="#">국토안보부 기능 보호를 위한 국방부 군사력 동원</a>	Memorandum	6.7
난민·이민 제한	<a href="#">난민 수용 프로그램 조정 및 전면 중단</a>	EO 14163	1.20
시민권 및 복지 제한	<a href="#">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제한<sup>13)</sup></a>	EO 14160	1.20
	<a href="#">국경 개방 정책에 대한 국민 세금 보조 중단</a>	EO 14218	2.19
	<a href="#">불법체류자의 사회보장법상 복지 혜택 차단</a>	Memorandum	4.15
국가안보 목적의 입국 통제	<a href="#">Tren De Aragua 집단에 대한 적성국 외국인법 발동</a>	Proclamation	3.15
	<a href="#">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a>	EO 14161	1.20
	<a href="#">외국 테러범 등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국 출신자 입국 제한</a>	Proclamation	6.4
	<a href="#">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하버드대학교의 위험 요소 해결</a>	Proclamation	6.4

자료: 백안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난민·이민 제한]** 급증하는 난민과 이민자 유입이 미국 사회에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맞게 난민 수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2025년 1월 27일부터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USRAP: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동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90일마다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를 통해 추후 정책 변경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해당 명령이 발표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강화 행정명령(EO 14013, 2021년 2월 4일)」은 철회됨.

■ **[시민권 및 복지 제한]** 이민자의 시민권 남용을 막고 미국 시민과 합법적 이민자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자 함.

- 미국 수정 헌법 14조의 시민권 부여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미국에서 출생했다라도 부모가 미등록 이민자거나 입시 체류자 신분이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함.
- 미등록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복지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부당 지출을 전면 중단하고, 복지 수급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함.

13) 연방지방법원에서 해당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켰으나, 6월 27일 연방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은 22개 주 외 다른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게 됨.

- 미등록 이민자가 신분을 속여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사기 남용 사례 적발을 위한 수혜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망자 명의로 혜택을 제공받는 이민자의 신분 도용에 대한 형사 기소를 대폭 강화함.

■ **[국가안보 목적의 입국 통제]** 테러를 비롯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미국 사회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 Tren de Aragua)’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적성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sup>14)</sup>을 발동하여 사법 절차 없이 미국 내 범죄 조직원을 신속 격리·추방하는 등 국내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함.
- 모든 비자 신청자와 입국 희망자에 대한 강화된 심사와 신원조회 체계를 재구축(2021년 1월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미국 내에서 테러 조직을 옹호하는 반미·극단주의 성향의 외국인을 식별하여 추방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입국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시함.
- 테러 방지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 출신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정보 공유 협력이 미흡한 국가나 테러 위험 국가 출신자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12개국(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등) 출신자는 전면 입국 금지, 7개국(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은 부분적 제한을 둠.
-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의 범죄·기술 탈취 관련 정보 제공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가안보상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의 비자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함.
  - 해당 행정조치는 미 「이민법(INA)」 제212(f)조 외국인의 입국 금지 권한, 제215(a)조 출입국 통제 권한 등의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특정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중단한 첫 사례임.

■ **[고액 영주권 프로그램 신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액 투자 이민 제도인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sup>15)</sup> 최근에는 골드카드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어 7만 명 이상이 사전 관심 등록을 신청함.<sup>16)</sup>

- 트럼프 대통령은 5백만 달러(약 60억 원)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뿐 아니라 시민권 취득 지원을 포함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골드카드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 비자 대체를 목표로 함.
    - \* EB-5 프로그램: 최소 105만 달러 및 최소 10명 신규 고용 창출 또는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 높은 지역에 80만 달러의 투자금 기여 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골드카드 신청 사이트(trumpcard.gov) 개설 후 신청 의향을 밝힌 사람이 7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2만 장을 발급할 경우 수입이 1조 달러(약 1경 원) 규모에 달한다고 추정함.
- 그러나 아직 세부 자격 기준, 세금 처리 방식, 법적 승인 절차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회 승인이 필수라는 점에서 행정부 단독 실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sup>17)</sup>

14) 1789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전시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침입·위협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을 미국 내에서 구금, 제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임.

15) “Trump Plans ‘Gold Card’ Alternative to Green Cards for ‘High Level People’”(2025. 2. 25.), *The New York Times*.

16) “Howard Lutnick hails Donald Trump’s \$5mn investor visa as almost 70,000 apply”(2025. 6. 17.), *Financial Times*.

17) “Trump floats ‘gold card’ to grant US residency to wealthy foreigners”(2025. 2. 25.), *POLITICO*.

## 나. 이민 정책 이행 현황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추방된 콜롬비아 출신 이주자들의 입국을 거부한 콜롬비아 정부에 관세 부과 및 즉각 비자 취소를 예고(2025년 1월 26일)하였으나, 양국이 합의를 이루면서 철회함.
  -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미국발 송환 군용기 2대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TruthSocial)을 통해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발표함.
    - 구체적으로 △모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 부과, △일주일 내에 해당 관세를 50%로 인상,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지지자들의 여행 금지 및 비자 즉각 취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금융·은행 제재 등이 포함됨.<sup>18)</sup>
  -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맞섰으나, 이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IEEPA에 따라 작성되었던 관세 및 제재 초안이 보류되었음.<sup>19)</sup>
-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 외국인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250명을 베네수엘라 갱단 'TdA' 조직원으로 규정하여 엘살바도르로 추방함(2025년 3월 16일).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5일 서명한 포고령에 따라 TdA 조직원 250명을 추방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해당 범죄 조직과 무관하거나 미국 내 합법 체류자로 확인됨.
    - 2019년 10월 미국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 유예' 보호 명령을 받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갱단 '엠에스(MS)-13'의 조직원으로 지목되어 엘살바도르로 추방되고 테러범 수용센터(CECOT)에 수감됨.
      - \* 가르시아는 해당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25년 6월 6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과거 이주민들의 미국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다시 기소됨.<sup>20)</sup>
  - 미 연방대법원은 5월 16일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정부에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함.
    -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추방되었던 가르시아 사례를 언급하며 추방 24시간 전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함.<sup>21)</sup>
-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미국 대학생들을 '반(反)미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추방을 진행하고 있음.
  -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자국 내에 있는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을 취소하여 추방하겠다고 밝힘.<sup>22)</sup>

18) "Trump imposes 25% tariffs on Colombia as deported migrant flights blocked"(Jan 27, 2025), *BBC*.

19) The White House(2025. 1. 26.),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1/statement-from-the-press-secretary/?utm\\_source=wh\\_social\\_share\\_button](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1/statement-from-the-press-secretary/?utm_source=wh_social_share_button).

20) "US brings back El Salvador deportee to face charges"(Jun 8, 2025), *BBC*.

21)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24A1007(May 16, 2025),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a1007\\_g2bh.pdf](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a1007_g2bh.pdf).

- 트럼프 행정부는 반(反)이스라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음.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ICE는 1월 20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사람 중 4,736명의 비자를 종료시킴.<sup>23)</sup>
- 일례로 ICE는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가자전쟁 관련 친(親)팔레스타인 반전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2025년 3월 8일)하였다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3개월 만에 석방함.<sup>24)</sup>

■ 올해 6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며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이 발생함.

- 이번 시위는 6월 6일 ICE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의류 도매상가와 홈디포 등을 기습 단속하면서 촉발됨.
-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시위에 연방정부의 개입을 공식화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도록 지시(2025년 6월 7일)하였으며,<sup>25)</sup> 이틀 뒤인 9일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로 동원하겠다고 밝힘.<sup>26)</sup>
  - 주방위군은 주와 연방 정부 양측의 명령을 모두 따르는 조직으로, 일반적으로는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동원됨.
    - \*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이 동원된 것은 1965년 이후 첫 사례로 알려짐.
  -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6월 9일 밤 해병대원 700명이 LA에 파견되었으며, 13일 시위 현장에 투입됨.<sup>27)</sup>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9일 주방위군 동원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sup>28)</sup> 10일에는 불법적인 해병대·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가치분 명령을 법원에 요청함.
  - 6월 12일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함.
  - 6월 20일 미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이 불법이라는 찰스 브레이어 판사의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연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함.<sup>29)</sup>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규모 미등록 이민자 추방 정책과 경제적 현실 사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농업 및 숙박업 분야에 대해 일시적 예외 조치를 시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짐.

22) “Immigration Authorities Arrest Pro-Palestinian Activist at Columbia”(Mar 9, 2025), *The New York Times*.

23)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2025. 4. 17.), “Policy Brief: The Scope of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Students,” <https://www.aila.org/policy-brief-the-scope-of-immigration-enforcement-actions-against-international-students>.

24) “Pro-Palestinian activist Mahmoud Khalil set free after judge orders Trump administration to release him”(2025. 6. 20.), *POLITICO*.

25) The White House(2025. 6. 7.), “Department of Defense Security for the Protection o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unc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department-of-defense-security-for-the-protection-of-department-of-homeland-security-functions/>.

26) “Trump Administration More Than Doubles Federal Deployments to Los Angeles”(2025. 6. 9.), *The New York Times*.

27) “US Marines make first detention in LA as more protests expected”(2025. 6. 14.), *Reuters*.

28) “California Lawsuit Challenges Trump’s Order Sending National Guard to L.A.”(2025. 6. 9.), *The New York Times*.

29) “US court allows Trump to keep control of National Guard in LA”(2025. 6. 20.), *BBC*.

- ICE는 1~6월 초 사이 1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을 체포 및 구금했으며,<sup>30)</sup>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농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음.<sup>31)</sup>
- 미국 농업·관광 업계는 강경한 이민 단속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과 호텔업 종사자를 보호”할 것을 언급하며<sup>32)</sup> 6월 13일 농장, 호텔, 레스토랑에 대한 ICE 단속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함.
  - 그러나 백악관 내부 강경파(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와 온건파(브룩 롤린스 농업부 장관 등) 간 치열한 논쟁으로 중단, 재개 결정이 반복되는 혼란이 발생함.<sup>33)</sup>
- 6월 17일 ICE는 농업·관광업에서도 예외 없이 불법 이민자 추방이 추진될 것이며, 체포 목표를 일일 3,000 명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3.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외국인력 유입 동향

■ 2002년 이후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sup>34)</sup>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그림 3 참고).

- 비농업 민간 부문의 베버리지 곡선은 2002~08년 기간에 비해 2009~19년, 2020~24년 기간에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구인 비율(job opening rate)<sup>35)</sup>이 상승하여 노동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 베버리지 곡선의 이동은 실업률 요인(노동시장 미스매치)보다는 구인 비율의 상승(노동 수급 불균형)에 주로 기인함.
  - 노동공급 부족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발적 조기 퇴직 확산과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정체에서 기인함.
- 베버리지 곡선의 바깥쪽 이동은 내국인 기피도가 높고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상기 업종에서의 외국인력 의존도는 다양한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됨.<sup>36)</sup>

30) “Trump’s immigration enforcement record so far, by the numbers”(2025. 6. 18.), *Reuters*.

31) USDA(2024. 11. 21.), “Legal status of hired crop farmworkers, fiscal 1991-2022.”

32) Truth 소셜미디어(2025. 6. 12.),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114670684664650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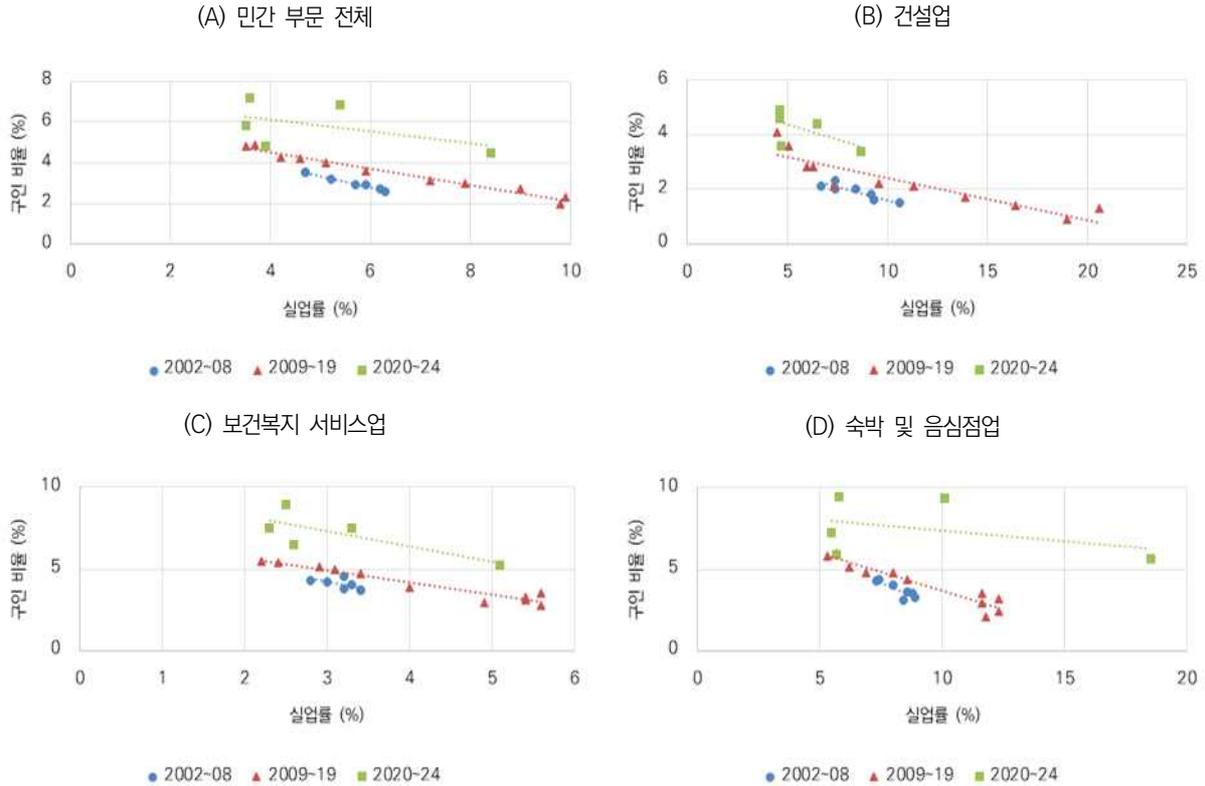
33) “Trump officials reverse guidance exempting farms, hotels from immigration raids”(Jun 16, 2025), *The Washington Post*.

34) 베버리지 곡선은 실업률과 구인 비율(Job opening rates)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구인 비율이 상승하며, 경기 침체기에는 반대 양상을 보임(우하향 형태). 단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변화하는 경우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실업률과 구인비율이 동시에 상승하여 베버리지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가 심화하여 비효율성이 커진 것을 의미함.

35) 구인 비율은 전체 일자리 중 현재 채워지지 않은 구인 공고의 비율이며, 구인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함.

36) Luhby, T.(2024. 3. 21.), “These businesses say they can’t keep up with consumer demand without immigrant workers. Americans just don’t want the jobs. CNN Business,” <https://edition.cnn.com/2024/03/21/business/construction-industry-needs-immigrant-workers/index.html>(검색일: 2025. 6. 13.).

그림 3. 미국 비농업 민간 부문의 기간별 실업률과 구인 비율(2002~24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https://www.bls.gov/jlt>),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https://www.bls.gov/cps/tables.htm>); 장영욱 외(2025 발간 예정),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표 2.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 근로자 비중(2023년)

산업	외국인 근로자 (천 명)	외국인 근로자 비중 (%)	이민 근로자 (천 명)	이민 근로자 비중 (%)
농림축산업	517.4	26.8	400.2	20.7
건설업	3,029.7	26.7	2,074.3	18.3
운송창고업	1,997.4	23.6	810.3	9.6
숙박음식점업	2,421.3	22.2	1,406.5	12.9
전문서비스업	4,587.7	21.8	2,233.6	10.6
제조업	3,258.1	20.0	1,500.1	9.2
보건복지서비스업	4,181.5	18.2	1,224.4	5.3
정보통신업	526.2	17.2	218.5	7.2
도소매업	3,393.0	16.3	1,448.3	7.0

주: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며, 이민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함. 자세한 설명은 본고 각주 37) 참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 및 이민 근로자 비중은 해당 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또는 이민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American Community Survey(2023) 자료를 저자 재가공.

- 2023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노동인구 약 1억 6,569만 명 중 3,138만 명(18.9%)이 외국인이며, 이 중 이민 근로자는 1,400만 명(8.4%)이었음.<sup>37)</sup>
  -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다르며, 농림축산업(26.8%), 건설업(26.7%), 운송창고업(23.6%), 숙박음식점업(22.2%) 순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았음(표 2 참고).
  - 시민권자를 제외한 이민 근로자 비중은 농림축산업(20.7%), 건설업(18.3%), 숙박음식점업(12.9%), 전문서비스업(10.6%) 순임(표 2 참고).
    - 운송창고업(9.6%), 보건복지서비스업(5.3%), 전문서비스업(10.6%)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 비해 이민 근로자 비중이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해당 업종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2023년 신규 이민자<sup>38)</sup>가 가장 많이 유입된 업종은 농림축산업(근로자 1,000명당 22.4명), 건설업(14.2명), 숙박음식점업(14.2명), 전문서비스업(11.4명)으로,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서 이민 노동력이 해당 분야의 노동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전역에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민자는 1,100만~1,37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800만 명가량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sup>39)</sup>
  - 기관에 따라 추정치가 상이하지만, 미국의 미등록 이민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sup>40)</sup>
    - 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는 약 1,37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300만 명가량 증가한 수치임.<sup>41)</sup>
  - 약 80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4.9%를 차지함.<sup>42)</sup>
    - 전체 근로자 중 미등록 이민자의 비중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농업(15.1%), 건설업(14.1%), 숙박음식점업(7.6%) 순으로 나타남(그림 5 참고).
    - 농업 분야 중 분류 및 선별 작업자(Grader and Sorter)의 39%, 작물 수확자(Crop worker)의 29%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음.

37)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민 근로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 영주권 또는 일시적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함.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 근로자는 모두 합법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를 포괄하는 개념임. IPUMS USA,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usa.ipums.org/usa/>(검색일: 2025. 6. 15.).

38) 조사 기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이민한 사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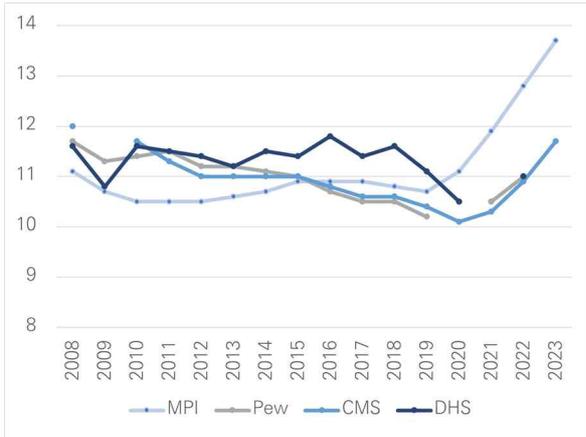
39) Economic Policy Institute(2025. 4. 15.), <https://www.epi.org/publication/unauthorized-immigrants>(검색일: 2025. 6. 28.).

40) 통상적으로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외국인 통계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이주민 규모를 추정함. 본 고에서는 자체적으로 미등록 이주민 규모를 추정하는 대신 다른 기관의 추정치를 참고하였음.

41) Migration Policy Institute(2025. 2.), <https://www.migrationpolicy.org/news/unauthorized-immigrant-population-mid-2023>(검색일: 2025.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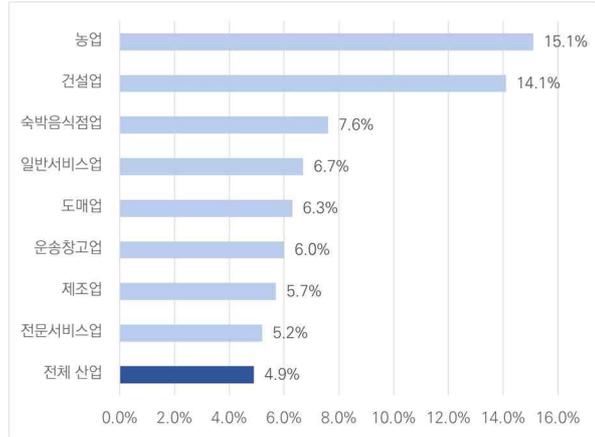
42) American Immigration Council(2024), "New Americans in the US," p. 6.

그림 4. 미국 미등록 이민자 추이(2008~23년)  
(단위: 백만 명)



주: MPI(Migration Policy Institute), Pew(Pew Research Center), CMS(Center for Migration Research),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자료: Economic Policy Institute(2025. 4. 15.), <https://www.epi.org/publication/unauthorized-immigrants/>(검색일: 2025. 6. 28.).

그림 5. 산업별 미등록 이민 근로자 비중(2023년)  
(단위: %)



주: 산업별 근로자 중 미등록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American Immigration Council(2025.2.28.)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blog/number-of-immigrants-in-us-increases-yearly-and-thats-a-good-thing>(검색일: 2025. 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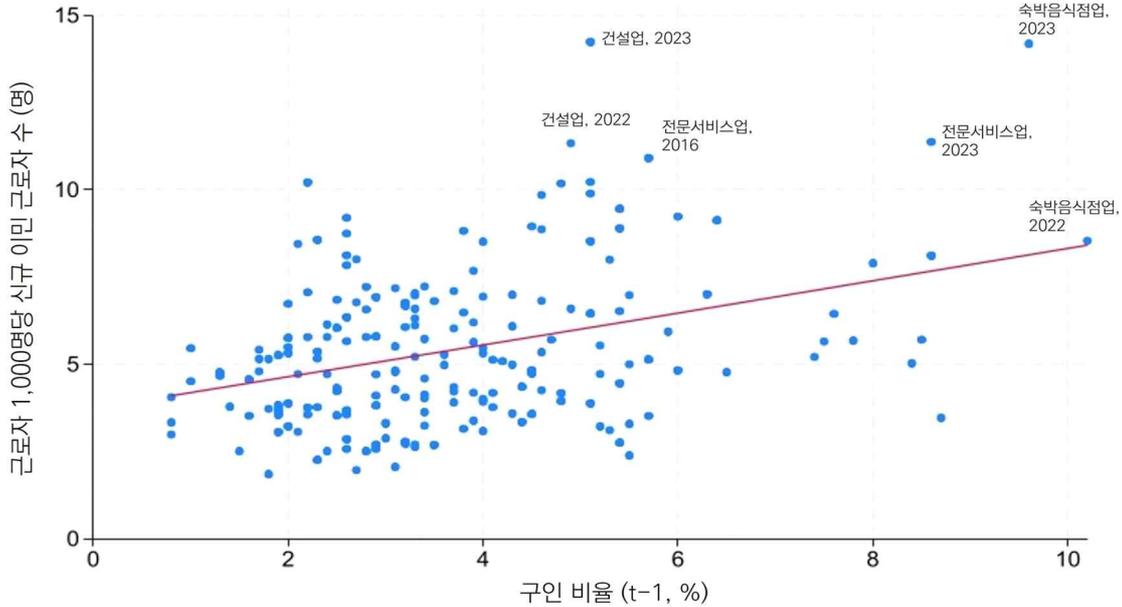
■ 2008~23년 기간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구인 비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이는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이민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함(그림 6 참고).

- 구인 비율 자료가 가용한 비농업 일자리를 봤을 때, 팬데믹 기간 숙박음식점업(2021년 10.2%, 2022년 9.6%), 보건복지서비스업(2021년 8.7%, 2022년 8.4%), 전문서비스업(2021년 8.6%, 2022년 8.6%), 운송창고업(2021년 8.5%, 2022년 8%)에서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음.<sup>43)</sup>
- [그림 6]은 1년 전 구인 비율이 높았던 산업에서 이후 1년간 신규 이민 근로자 유입 규모가 컸음을 보여줌.
  - 팬데믹 기간 구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숙박음식점업에 신규 이민 근로자가 가장 많이 들어왔으며,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전문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도 신규 이민 근로자 유입이 많았음.
- 자료의 한계로 구인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던 농업 분야에서 신규 이민 근로자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sup>44)</sup>
- 미국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목적이 컸으므로, 기존 이민자의 추방과 단속은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43)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https://www.bls.gov/jlt>)에서 자료 추출(검색일: 2025. 6. 15.).

44) Richards, T. J.(2018), "Immigration reform and farm labor marke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00(4), 1050-1071;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2024), Farm labor, <https://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farm-labor/>(검색일: 2025. 5. 23.).

그림 6.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유입과 구인 비율의 관계(2008~23년)



주: 2008~23년 사이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1기 전 구인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포도이며, 붉은 선은 오차항을 최소화하는 적합값(fitted value)을 나타냄.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https://www.bls.gov/jlt>), IPU MS USA, American Community Survey(<https://usa.ipums.org/usa/>).

■ 미국의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함.

$$newimmigrant_{rt} = \alpha + \beta \left( \frac{Unemployed}{Job\ Openings} \right)_{r(t-1)} + \gamma X_{rt} + \phi_r + \phi_t + \epsilon_{rt} \quad [식\ 1]$$

- 신규 이민자 유입( $newimmigrant_{rt}$ )과 1기 전 구직-구인 비율( $\left( \frac{Unemployed}{Job\ Openings} \right)_{r(t-1)}$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08~23년( $t$ )의 미국 51개 주( $r$ )별 패널 데이터를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 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으로 분석하였음.<sup>45)</sup>
  - 종속변수는 주별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자 또는 신규 이민 근로자 수<sup>46)</sup>로, 분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의 주별 노동시장에 진입한 외국인 중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인구를 사용함.
  - 주요 독립변수인 1기 전 구직-구인 비율은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실업자) 수’로, 구직-구인 비율이 1보다 큰 것은 노동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음을, 1보다 작은 것은 노동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음을 의미함.

45) 자료는 IPUMS의 American Community Survey(신규 이민자 비율, 기존 이민자 비율, 내국인 유입 비율), 미국 노동통계국의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구직-구인 비율),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 Wages(연간임금)를 활용함.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부표 1]을 참고.

46) 신규 이민자는 분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정 주로 유입된 모든 이민자 수를 의미하며, 신규 이민 근로자는 신규 이민자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본고에서는 신규 이민자(또는 이민 근로자) 수를 각 주의 전체 인구(또는 전체 근로자 인구)로 나눈 뒤 1,000을 곱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음.

- 신규 이민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 $X_{it}$ )를 통제하기 위해 1기 전의 연간 임금에 로그를 취한 값, 기존 이민자 비중, 해당 주의 내국인 유입자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각 주 및 분석 연도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주 고정효과( $\varphi_{it}$ )와 연도 고정효과( $\varphi_{it}$ )를 포함함.

■ 회귀분석 결과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주에서 신규 이민자 및 이민 근로자 유입이 더 크게 이루어졌음이 나타남.

- [표 3]의 열(1)에서 주별 신규 이민자는 1기 전 구직-구인 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열(2)에서 다른 통제변수와 주 고정효과를 포함했을 때도 동일하게 유지됨.
  - 로그 연간임금은 열(1)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더 많은 통제변수를 넣으면 유의성을 잃음.
  - 열(2)의 결과에서는 기존 이민자 비중과 내국인 근로자 유입이 높은 주에서 신규 이민자가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남.
- 상기한 결과는 열(3)과 열(4)에서 이민 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남.
  - 단 내국인 유입은 전체 이민자와 달리 신규 이민 근로자의 유입과는 상관관계가 낮는데, 이는 유입된 내국인 근로자와 이민 근로자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열(2)와 열(4)의 결과는 1기 전의 구직-구인 배율이 표준편차 한 단위(1.57)만큼 낮아지면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자가 0.41명, 신규 이민 근로자가 0.31명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때 신규 이민자의 유입으로 이를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회귀분석 결과: 주별 신규 이민자 유입과 노동 공급 부족, 확률효과 GLS 모형

구분	종속변수: 전체 신규 이민자		종속변수: 신규 이민 근로자	
	(1)	(2)	(3)	(4)
구직-구인 배율 (t-1)	-0.198*** (0.076)	-0.259*** (0.075)	-0.131* (0.077)	-0.200** (0.078)
로그 연간임금 (t-1)	7.377*** (1.298)	-2.886 (1.932)	9.245*** (1.031)	2.809 (2.029)
기존 이민자 비중		0.308*** (0.148)		0.390*** (0.094)
내국인 근로자 유입		0.009** (0.004)		0.005 (0.004)
상수	-72.736*** (13.819)	32.301 (20.371)	-94.124*** (10.971)	-28.320 (21.394)
주 고정효과	x	o	x	o
연도 고정효과	o	o	o	o
R <sub>2</sub> (Overall)	0.504	0.883	0.551	0.803
관측치	765	765	765	765

주: 열(1)과 열(2)는 전체 이민자를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 결과이며, 열(3)과 열(4)는 종속변수를 이민 근로자로 한정했을 때의 결과임; 열(1), 열(3)은 구직-구인 비율과 연간임금, 연도고정효과만을 넣었을 때, 열(2)와 열(4)는 다른 통제변수와 주별 고정효과를 추가하였을 때의 결과임;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 p<0.10. \*\* p<0.05. \*\*\* p<0.01. 자료: 각주 45)에 기입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부표 1] 참고.

## 4. 평가와 시사점

### 가. 평가

■ **앞선 분석에서 내국인만으로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일어났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통제가 미국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을 시사함.**

- 팬데믹 기간 농업, 비농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노동공급 부족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음.
- 트럼프 2기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신규 이민자 유입을 저해할 뿐 아니라 기존 노동시장의 외국인 이민자를 구금, 추방함으로써 노동력 손실의 결과를 초래함.
- 최근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해 농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단속 대상이 되거나 단속이 두려워 출근하지 않는 농장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확기 노동력 수급에 피해를 주고 있음.<sup>47)</sup>
  - 미국 전역의 건설업체에서 일부 외국인력의 근무 중단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비용 상승, 건설 지연,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sup>48)</sup>
  - 외식업체는 이민 단속 강화와 임시보호지위 연장 취소로 인해 인력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짐.<sup>49)</sup>
- 2025년 6월 24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함.<sup>50)</sup>
  - ICE 단속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건설업, 숙박업, 농업은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노동 공급 부족은 경제 전체에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양극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책의 세부 내용과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인종적 배경에 따라 뚜렷한 대조를 보임.<sup>51)</sup>**

- Pew Research Center(2025년 6월)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2%에 그침.
- 공화당 지지층의 78%가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81%는

47) "On a Quiet Southern Border, Empty Farms and Frightened Workers"(2025. 6. 27.), *New York Times*.

48) "We can't do without these people: Trump's migrant crackdown has businesses worried"(2025. 6. 28.), *BBC*.

49) "Donald Trump's immigration restrictions threaten restaurant labour shortage"(2025. 6. 8.), *Financial Times*.

50) "Fed Chair Says Trump Immigration Policies Slowing Economic Growth"(2025. 6. 25.), *Forbes*.

51) J. Baxter Oliphant *et al.*(2025. 6. 17.), "Americans Have Mixed to Negative Views of Trump Administration Immigration Actions," Pew Research Center(검색일: 2025. 6. 25.).

반대 의견을 나타내 당파적 정체성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인종·민족별 여론 분석 결과, 집단 간에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음.
  - 히스패닉계는 8개 주요 이민 정책 중 7개에 대해 40%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아프리카계는 모든 정책에 대해 33% 미만이었으나, 백인은 다수의 정책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초반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보다 높았으나, LA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및 군 투입 이후 대중 여론의 변화가 감지됨.

- 모닝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개의 핵심 정책 중 국가안보(50%)와 이민 정책(49%)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sup>52)</sup> NBC 뉴스 조사에서도 51%의 미국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안보 및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45%)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함.<sup>53)</sup>
- 그러나 LA 시위 발생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트럼프 2기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47%에서 44%로 3%p 하락했으며, '대규모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월 43%에서 6월 33%로 하락함.<sup>54)</sup>
  - 이러한 변화는 시위와 이에 대한 군 투입이라는 강경 대응이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한국은 최근 일시적,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팬데믹 이후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정 산업, 업종, 지역에서 더 심한 인력난을 경험한 바 있음.
  -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빈 일자리율<sup>55)</sup>이 상승했다가 최근에서야 팬데믹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그림 7 참고).
  -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0.2%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되어,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2024년 기준 3.7%)이며, 숙박·음식점업(2.0%), 제조업(1.3%), 도소매업(1.1%)이 그 뒤를 이음.<sup>56)</sup>
  - 2022년 지역별 구인배수<sup>57)</sup>를 보면, 서울은 구직자가 일자리의 두 배가량인 반면, 충남, 충북, 전남 등 지역은 일자리 수보다 구직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고).

52) Eli Yokley & Cameron Easley(updated weekly), "Tracking Public Opinion of Trump's Washington," Morning Consult(검색일: 2025. 6. 25.).

53) "Poll: Americans disapprove of Trump's performance as Republicans manage splits over spending plans"(2025. 6. 15), *NBC News*.

54) "Trump approval steady at 42%, support weakens for his immigration policy, Reuters/Ipsos poll finds"(2025. 6. 17.), *Reuters*.

55) 빈 일자리는 조사기준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로 정의되며, 빈 일자리율은 빈 일자리를 전체 일자리와 빈 일자리의 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56) 고용노동부. 2024년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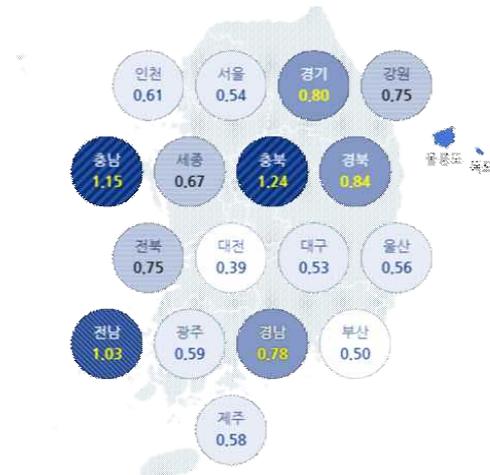
57) 구인배수는 구인인원 대비 구직자 수로, 1 이하면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가 적은 상태, 1 이상이면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은 상태를 의미함.

그림 7. 분기별 빈 일자리 수 및 빈 일자리 비율, 300인 미만 사업장(2019~25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저자 재구성.

그림 8. 지역별 구인배수(2022년)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구인배수,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검색일: 2025. 4. 27.).

- 또한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 2050년에는 2,4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sup>58)</sup>
  -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 부족 규모가 2033년에는 8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sup>59)</sup>
  - 산업별 노동수급 불균형 역시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 이철희(2024)는 2031년까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약 37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음식점 및 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운송업 등에서도 12만~18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sup>60)</sup>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늘리는 등 외국인력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인 고용허가제(E-9) 인원을 2022년 6만여 명 수준에서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000명으로 늘렸으며(2025년에는 13만 명으로 축소),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쿼터를 2023년 2,000명에서 2024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함.
  - 20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이민자 상주인구는 161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30만 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는 104만 명을 기록함(표 4 참고).
  - 2022년 이후 비전문취업(E-9), 전문인력(E-1~7), 재외동포(F-4) 비자 체류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분야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9 참고).

58)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59) 한국고용정보원(2025. 3. 18.), 「2023년~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60) 이철희(2024),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p. 118, 위즈덤하우스.

표 4. 이민자 상주인구 및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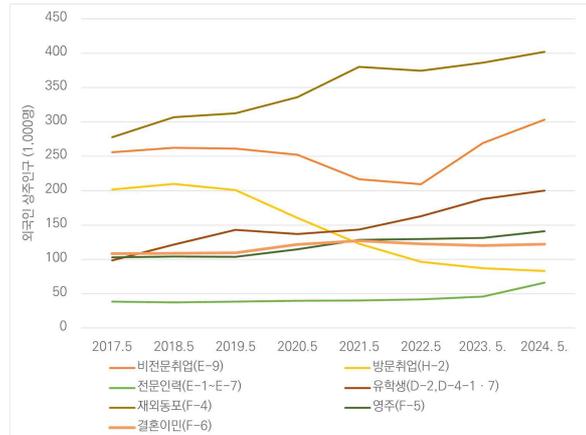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시기	상주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2017. 5.	1,278	904.3	868	70.8	67.9
2018. 5.	1,353	965.4	918.8	71.4	67.9
2019. 5.	1,371	947.2	894.8	69.1	65.2
2020. 5.	1,380	948.5	876.7	68.7	63.5
2021. 5.	1,381	942.9	886.6	68.3	64.2
2022. 5.	1,354	915.4	877.2	67.6	64.8
2023. 5.	1,481	1,011	957	68.3	64.6
2024. 5.	1,612	1,106	1,044	68.7	64.8

주: 이민자 상주인구는 15세 이상인, 91일 이상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인구 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그림 9.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연도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저자 재구성.

■ 향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의 이민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야 미국과 같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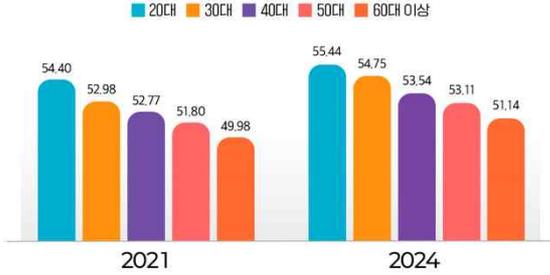
- 최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sup>61)</su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함.<sup>62)</sup>
  - 2024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3.38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52.27점) 대비 1.11점 상승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외국인 유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음.(그림 10 참고).
  - 이주민 증가의 영향에 대한 답변에서 인력난 해결에 도움(78.3%), 인구감소 완화에 도움(67.3%),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65.6%) 등 긍정적인 영향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음.
  - 또한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이주민 증가로 인한 복지체계 부담(73.1%), 사회 갈등 발생(58.0%), 범죄문제 악화(51.4%), 일자리 경쟁 증가(42.2%)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당 수준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 평가가 우세하나(긍정 43%, 부정 34%), 갈등에 대한 우려(긍정 31%, 부정 46%)와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긍정 16%, 부정 63%)는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1 참고).
- 미국 사례에서 보듯, 이민자 유입은 국내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의 수용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인원을 신중히 늘리는 한편 기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노동 부족 산업/업종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책정하여 관련 정책을 실행한다면 내국인 근로자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음.
  - 기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지원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KIEP**

61)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을 지수화한 수치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함.

6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6. 4.),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그림 10.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단위: 점)



주: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문항의 응답을 지수화한 수치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통계」.

그림 11. 이주민과의 상호작용 빈도 및 다문화 수용성

(단위: %)



자료: 한국리서치(2024. 7. 9.), 외국인 이민자 수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333>(검색일: 2025. 6. 30.).

부표 1. 회귀분석 주요 변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신규 이민자	816	인구 1,000명당 명	5.9	3.4	0.3	20.1
신규 이민 근로자	816	인구 1,000명당 명	4.5	2.8	0.0	16.3
구직-구인 배율	816	-	1.89	1.57	0.3	11.4
연간 임금	816	달러(경상가격)	51,931	12,345	32,822	117,888
로그(연간임금)	816	-	10.8	0.2	10.4	11.7
기존 이민자 비중	816	%	5.9	3.7	0.6	18.6
내국인 근로자 유입	816	인구 1,000명당 명	31.2	13.7	11.1	106.6

자료: 본문 참고.